

국제통화기금(IMF)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 (IMF Fiscal Monitor, '25.10월호)

- (전망결과) 국제통화기금(IMF)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(D2)를 '30년 64.3%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이는 정부가 발표한 '25~'29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(D1)* 수준을 고려한 결과입니다.

* 국가채무(D1)(기재부, GDP%) : ('25)49.1 ('26)51.6 ('27)53.8 ('28)56.2 ('29)58.0

※ 국가채무(D1) : 현금주의, 중앙정부 + 지방정부 채무

일반정부 부채(D2) : 발생주의, 중앙정부 + 지방정부 + 비영리공공기관 부채

- (재정운용 기초) 정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.
-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며, IMF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

IMF-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('25.9)

- “충분한 정책 여력, 마이너스 아웃풋 갭,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,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”(“Given sufficient policy space, a negative output gap, and inflation close to target, accommodative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appropriate.”)
- “정부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”(“The authorities' near-term fiscal stance and spending priorities in the 2026 budget proposal are appropriate.”)

- 아울러,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(△27조원), 비과세·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하반기에는 ‘재정구조 혁신TF*’를 가동하여 지출, 세입,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

* (주재) 기획재정부 제2차관(9.25일 출범)

(구성) 지출혁신반, 세제혁신반, 연금·보험혁신반, 재정관리혁신반, 국고혁신반 등

- IMF 또한 장기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, 재정수입 조성, 지출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
□ (전망의 변동성) 또한,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·재정여건, 정책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○ IMF가 부채 수준 전망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(rolling plan)으로, 정책대응에 따라 변동됩니다.

- 특히, 금번 '25~'29 중기계획상 수치는 지출, 세입 여건을 보수적으로 전제하여 산정한 목표치입니다.

○ 과거 IMF는 '23년 일반정부 부채(D2) 비율을 60% 넘게 전망(61.0% 전망('21.4월))하기도 했으나, 최종 실적은 50.5%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.

○ 아울러, 성장률 제고 등 정책대응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국가의 사례*도 있습니다.

* 일반정부 부채(D2) 개선 사례('18→'23, IMF Fiscal Monitor, GDP%):

(네덜란드)51.6→45.9 (포르투갈)121.1→97.7 (그리스)189.6→165.2 (스웨덴)39.9→31.8 등

담당 부서	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호 (shinj iho7@korea.kr)

